

1992년 3월 13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

○ 일시: 1992년 3월 13일(금) 오전 9시 개의

○ 발언자:

- 고다마 겐지(児玉健次) 의원(일본공산당 소속 중의원 의원)
- 미야자와 기이치(宮澤喜一) 내각총리대신(대장성 관료, 정치가,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, 경제기획청 장관, 중의원 의원, 통상산업대신, 외무대신, 내각관방장관, 부총리, 대장대신, 우정대신, 농림수산대신, 재무대신, 자민당 총무회장, 자민당 총재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305261X01719920313&spkNum=189¤t=55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고다마 의원은 지난번 한국에서 한 미야자와 총리의 연설 대목을 인용하면서, 민족과 성(性)의 존엄을 유린한 가장 비인도적 국가범죄가 **중군위안부** 문제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보상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함. 또한 보상을 위한 특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함. 미야자와 총리는 **위안부** 문제가 한반도 전역에 걸친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, 국가 간 관계에서는 이미 여러 조약을 통해 법률적·정치적 차원에서 보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함.

○ 주요 내용 번역

▷ **고다마 위원** “총리는 올해 1월 17일 서울에서 하신 연설에서 ‘역사상 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해자였고 귀국이 그 피해자였던 사실이 있습니다.’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이 발언에는 총리의 여러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만, 그 가운데 **중군위안부** 문제도 염두에 둔 것입니까?”

▷ **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** “그 부분은 역사적인 것을 회상하여 말한 것입니다. 한국 분들이 이른바 **중군위안부**로서 커다란 고통을 경험하신 게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것도 생각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.”

▷ **고다마 위원** “지금 총리는 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조선반도 전체라고 생각합니다만, 어떻습니까?”

▷ **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** “제가 말한 것은 한국이었기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만,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이것은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”

- ▷ **고다마 위원** “일본의 조선에 대한 대단히 가혹한 식민지 지배, 그 아래서 괴로워하는 조선 민족을 일본은 침략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. 민족의 존엄과 성(性)의 존엄을 짓밟는 가장 비인도적인 국가적 범죄행위, 그것이 **중군위안부** 문제였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

총리에게 묻겠습니다. 가해자라는 말이 꽤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.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은 타민족에 대해 국가적 범죄행위를 가했던 나라, 그런 입장에서 무언가 보상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? 총리에게 묻습니다. 당신의 말이니까요.”

- ▷ **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** “한국에 관해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. 그래서 법률적 혹은 정치적으로 말한다면,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필두로 다국간 또는 양국간 조약이나 공동선언 등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.”

(중략)

- ▷ **고다마 위원** “저는 일본공산당을 대표하여 1992년도 예산 3안과 관련해 정부가 이것을 철회하고 편성 변경을 요구하는 동의(動議)에 대해서 제안 이유 및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. (중략)

둘째, 냉전 구조를 전제로 한 방위계획 대강(大綱), 중기방위력정비계획(中期防)를 철폐하고 새로운 정면장비(正面裝備)¹⁾의 발주 중지, 미군에 대한 배려와 예산 폐지 등 대담한 군축 정책을 실행하여 군사비를 반감하는 것입니다. **중군위안부**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권력이 행한 역사적인 범죄행위의 책임을 밝히고 보상을 위한 특별입법을 만들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. 국가보상의 견지에서 피폭자보호법의 제정, 시베리아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.”

1) 자위대의 장비 중 전차, 화기, 호위함, 전투기 등 직접 전투용 무기를 가리킨다.